

박금력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

# “맞춤형 복지급여로 행복을 맞춰드립니다”

## 수급자 가구여건 따라 급여별로 선정기준 세분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다시 설 수 있게 도와 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 14년만인 7월 대대적인 개편을 꾀했다.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 한 것이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박금력 복지부 맞춤형복지급여추진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맞춤형 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봤다.

**지난 1일자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됐습니다. 맞춤형 급여란 무엇인가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모두 드렸으나 최저생계비를 1원이라도 넘으면 모든 지원이 끊

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올라가면 모든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이 일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립에 나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합니다.

또 수급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라는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던 방식에서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기준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하기 위해 해서 최저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

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최저로 생계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그 항목의 가격을 정하는데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오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얼마나 어려운지 하는 상대적 빈곤개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기준이 자연스럽게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위소득은 기존 최저생계비와 마찬가지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공표하며 올해 중위소득은 지난 4월 4인가구 기준으로 422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하면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각 급여별로 수급자를 선정하

는 기준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존에 최저생계비로 단일하게 적용됐던 수급자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28%(생계), 40%(의료), 43%(주거), 50%(교육)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금액으로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이 422만원이므로 4인 가구인 수급자의 소득이 118만원 아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다 받게 되고 118만원에서 169만원 사이면 생계를 빼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169만원에서 182만원 사이면 주거와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인 아들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423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다. 또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기준을 추가 완화하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분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맞춤형 급여는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지금까지 접수된 신청을 차질없이 처리해 가급적 빨리 첫 급여를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편 후 첫 급여는 7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주거실태조사까지 완료돼야 보장결정이 가능하므로 6월 둘째주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대략 8월부터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에 지급을 받으시더라도 신청월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면 급여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나요?**

전반적으로 지원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만 제도의 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사례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지급받는 금액이 적어지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받으시던 금액이 줄어들면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고려, 제도 변경 때문에 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변경 전에 받으셨던 금액만큼은 그대로 보전해 드릴 예정



입니다.

**기존에 지원을 받던 사람들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 수급자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7월부터 바뀐 제도에 따라 새롭게 계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133만 명 정도인데 저희 추계로는 수급자 수가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원금액도 늘어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둘 다 받으시는 경우 평균적으로 5만 4000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 수 있나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로 전화하면 됩니다. 또 복지포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추진단은 개편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편·연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아울러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기존 탈락자 분들에게 신청 안내와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마을 이·통장님 등 이웃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신청이 될 경우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혹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알고 계신다면 저희 제도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2014 대한민국 최우수은행 수상기념 상품 출시

# 유로머니선정 '2014 대한민국 최우수은행 수상기념' 상품 출시

## 난 할 수 있어 적금

내 자신과의 약속 지키고 우대금리 받으세요

최저 연 3.0% - 최고 연 5.5%

- 기본금리 : 연 3.0% (년액)
- 우대금리
  - ① 하나NBNK 가맹고객이 '내 자신과의 약속' 선택 시 최대 연 5.0%
  - ② 부스거래에 따른 우대금리 최대 연 1.5%

하나은행 로고

## 지역경제지표, 메르스 이전 수준 회복 '뚜렷'

백화점 매출 99.3%, 평택 소매점은 94.6%...관광지 방문객도 증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산으로 침체에 놓였던 지역경제가 점진적 회복세를 돌아선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별 상가 매출액, 관광지 방문객 수 등 주요 지역경제지표가 메르스 발생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주요 백화점 3사의 전국단위 주당 매출액은 메르스 우려가 최고조에 달한 6월 1~3주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15.7% 적었지만 4주와 이달 1주에는 작년 매출액의 99.3%까지 회복했다.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했던 평택시의 경우 6월 2주에는 대형소매점 매출액이 발생 전의 64%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3주부터 오름세를 시작, 7월 첫 주에는 94.6% 수준까지 회복했다.

확진자 발생으로 1개 마을 전체가 격리됐던 순창군은 대표적 관광지인 강천산 방문객 수가 한때 전년도의 23%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6월 2주부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이달 1주 방문객수는 전년 동기대비 128%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한옥마을의 입장객 수도 6월 2주부터 이달 1주까지 지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외부활동 위축으로 추축했던 전통시장 방문객 및 열차 이용객 수도 6월 2주를 기점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였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6월 2주에는 일평균 방문객 수가 3900명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7월 1주에는 지난해의 92% 수준인 7900명까지 증가했다.

KTX 열차이용객 수도 마찬가지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호남선(광주·전남 구간)과 경부선(신경주역) 기준으로 양 노선 모두 6월 2주까지는 이용객 수가 지속 감소했으나 이달 1주에는 메르스 발생 전 수준인 81%, 경부선은 86% 수준으로 올랐다.

행자부는 경남·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회복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지역경제 회복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직간접적 지원과 홍보가 지역경제 상황이 조기에 회복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명병로 기자

## 지방공기업에 임금피크제 도입

내년부터 모든 지방공사와 공단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재원은 신규인력 채용에 활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 확정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

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현재 3개 지방공기업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해소함으로써 효율성이 향상되고,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약

되는 인건비로 신규 채용을 확대할 수 있어 청년구직자의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며, 이미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도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한다.